아 산 정 책 연 구 원

이슈브리프

No. 2026-03(S)

대만 유사시에 대한 한국 여론의 지형

피터 리
연구위원
강충구
책임연구원

2026-07-01

이 이슈브리프는 미·중 간 대만해협 무력충돌(이하 대만 유사시)에 대한 한국 여론을 '아산폴(Asan Poll)'을 비롯한 2022~2026년 국내외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파를 막론하고, 북한 위협과 대중관계 악화 우려로 인해 대만 문제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이러한 정부의 신중한 전략과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한국인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대만에 대한 지원을 지지했다. 2026년 조사에서 비군사적 지원은 39.4%, 후방 군사지원은 15.6%, 주한미군 참전 허용은 14.0%였다. 단, 직접 전투 개입(파병) 지지는 3.0%에 그쳤고, 완전 중립(비개입)은 20.2%였다(표 2). 이는 모닝컨설트 등 기존 조사에서 20~35%로 나타난 파병 지지가 '지지-반대' 이분형 문항으로 인해 지원 형태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단순한 파병 찬성으로 과대측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한국 여론은 일본·호주·유럽 등 다른 미국 동맹국 대중과 대체로 유사했으며, 일부 군사적 대응 항목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가정한 조건에도 다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대만 유사시 한국인은 완전 중립과 직접 전투 개입을 모두 거부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 지지를 했다. 한국 대중의 지지는 동맹 차원의 '비용 분담' 요구로 제시될 때보다,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한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에 직결된다는 '국익' 관점으로 재구성(reframe)될 때 더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관련 정책을 강대국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국가이익에 기반한 능동적 선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만 유사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전략

2021년 이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명시돼 왔다. 그럼에도 정책 담론에서는 미·중이 대만을 둘러싸고 충돌할 경우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4년 야당 대표 시절 대만해협 상황이나 중국·대만 국내 문제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신중론의 근거로 북한의 지속적 군사위협과 양면전(two-front) 위험, 중국의 군사·경제적 보복 우려, 대만 방어에 투입할 한국군의 해·공군 전력 한계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중국의 지역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거부 방어(denial defense)' 개념을 제시하며 한미동맹의 역할과 임무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미 국가안보전략(NSS)과 2026년 국방전략(NDS)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의 대북 재래식 방위 '주된 책임' 부담, 제1도련선에서의 집단억제 등이 담겼다. 미국과 일부 동맹국 지도자들이 대만 방어 의지를 점차 강하게 표명해 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 점에서 예외적이었다.

한국 대중은 동맹국 가운데 예외인가?

그렇다면 한국 여론도 예외일까? 2026년 아산폴에서 76%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한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답했다(별로 중요하지 않다 12.6%, 전혀 중요하지 않다 3.6%). 2022년 모닝컨설트 조사는 대만 유사시 대응 선호에서 한국인이 아시아·유럽 동맹국 시민과 대체로 유사함을 보여준다(표 1). 모든 동맹국 대중이 군사적 대응보다 경제적 대응을 선호했다. 한국인은 호주에 못 미쳤지만 무기지원(46%), 파병(31%)에서 일본인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표 1. 대만 유사시 대응에 대한 각국 여론 (%, 순지지= 지지–반대)

국가	제재 부과			대만에 무기 지원			대만에 파병		
	지지	반대	순지지	지지	반대	순지지	지지	반대	순지지
호주	55	17	+38	49	23	+26	37	35	+2
한국	48	37	+11	**46**	36	+10	**31**	52	-21
일본	40	16	+24	32	27	+5	22	37	-15
프랑스	41	28	+13	34	35	-1	30	42	-12
독일	42	35	+7	31	45	-14	23	56	-33
영국	46	24	+22	32	35	-3	16	53	-37

출처: Samantha Elbouez, Jason McMann, and Scott Moskowitz, "American Allies Want U.S. Leadership on Taiwan if China Invades," Morning Consult (2022. 11. 16.).

직접적 군사개입이 소수인 결과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2025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조사에서 대만 파병, 중국 봉쇄 돌파를 위한 해군 투입 지지는 각각 43%, 47%였다. 호주·일본에서도 직접 개입을 제외한 일정 수준의 군사적 관여에 대한 지지는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른 한국 조사에서 파병에 대한 지지는 20~35%였다(2022년 동아시아연구원(EAI) 조사: 연합 군사작전 22.5%, 후방지원 42%, 2023년 글로벌타이완연구소(GTI) 조사: 군사지원 34.4%). 한국 대중도 다수가 비군사 지원을 지지하고, 약 3분의 1이 후방지원·파병 등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동맹국 가운데 예외가 아니었다.

제한된 신중함: 2024–2026년 아산 여론조사 결과

다만 위 조사는 대부분 '지지-반대' 이분형 문항을 사용해 직접적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를 과대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원은 2024~2026년 조사에서 상호 배타적 응답지로 구성한 순서형 척도를 사용했고, 2026년에는 2024년 네 개 응답지를 다섯 개로 세분했다. ① 완전 중립(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부분 중립(주한미군의 참전은 허용해야 한다), ③ 부분 개입(외교지원 등 비군사영역에 한정), ④ 후방지원(군수·정보지원 등), ⑤ 파병(군을 파견해 군사작전 수행)이었다.

분석 결과, 직접적 군사개입 지지는 기존 조사보다 크게 낮았다. 후방지원 15.6%, 파병 3.0%였다. 직접적 군사개입의 합은 2024년 12.7%에서 2026년 18.6%로 늘었으나, 이는 무응답층(13.0%→7.8%)이 감소한 결과로 다른 응답의 전반적 분포가 거의 동일했다는 점에서 여론이 강경해진 것으로 보긴 어려웠다. 실제 완전 중립(21.4%→20.2%), 부분 중립(11.9%→14.0%), 비군사적 지원(41.0%→39.4%)의 변화는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표 2).

표 2. 대만 유사시 한국인의 대응 인식 (%, 사례 수)

구분	**2024년** (n=1,020)	**2026년** (n=1,029)
완전 중립	21.4 (218)	20.2 (208)
부분 중립 (주한미군 참전 허용)	11.9 (121)	14.0 (144)
부분 개입 (비군사 지원)	41.0 (418)	39.4 (405)
직접 개입 (군사)	12.7 (130)	후방지원 15.6 (161) 파병 3.0 (31)
무응답	13.0 (133)	7.8 (80)

출처: 아산폴(2024년, 2026년).

'중국 위협' 조건의 한계

2026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보복 위협을 한국의 지원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의 변화를 살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으로, 앞서 완전 중립을 택한 20.2%(*n*=208)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2%가 입장을 바꿨으나, 처음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지지했던 이들 중 완전 중립으로 이동한 비율은 3%가 안 됐다. 입장을 바꾼 응답자 대부분은 중립이나 직접 개입이 아닌 중간 응답지로 이동했다(표 3). 낮은 관여 수준에서 의견을 바꾼 이들은 한 단계 위로(부분 중립→부분 개입 21.5%, 부분 개입→후방지원 13.3%), 직접 개입에서 의견을 바꾼 이들은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중국 반발을 가정한 한국인의 응답 변화 (%, 사례 수)

구분 (n=821)	**동일 응답 유지**	**최대 이동** (이동, %p(n))	**전체** (%, n)
완전 중립	-	-	2.6 (21)
부분 중립	63.9 (92)	부분 개입, 21.5 (31)	16.1 (132)
부분 개입	74.6 (302)	후방지원, 13.3 (54)	48.0 (394)
직접 개입: 후방지원	49.1 (79)	부분 개입, 34.2 (55)	19.0 (156)
직접 개입: 파병	77.4 (24)	후방지원, 12.9 (4)	4.6 (38)

주: 셀 단위 전환은 표본이 작아(파병 초기 응답 31명)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며, 제시한 분석은 경향을 나타냄.

결국 중국의 보복 위협은 대다수 응답자가 대만 지원 의사를 철회하게 만들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 48%의 대중이 비군사적 지원에, 19%가 비전투 군사지원에 안정적으로 묶여 있는 반면, 직접 전투 개입에 대한 지지는 5% 미만이었다.

정책 제언: '충실한 동맹'이 아닌 '국가이익' 프레임

2024~2026년 아산폴 결과는 한국인이 기존 조사가 밝힌 것보다 직접 전투 개입에 덜 적극적이며, 그 견해가 다양하게 분포함을 보여준다. 중국 보복이라는 억제 신호도 응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의 가설은, 지도자와 설문이 파병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 더 강한 개입에 대한 지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부시 행정부의 추가 파병 요청에 대한 반대는 86.3%에 달했으나,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단순한 대미 양보가 아니라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확보하는 '국익' 차원으로 재구성하자 2004년 중반에는 추가 파병 지지가 54%로 높아졌다.

이러한 '국익' 프레이밍 효과는 2026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쟁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질문한 2026년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30%·반대 55%였다. 그러나

한국 상선 HMM '나무호' 피격에 대한 대응으로 질문한 같은 해 5월 조사에서는 자국 상선 호위로 한정한 파병 지지가 48%로 나타났다(미국에 대한 군사지원으로서의 파병 16%, 파병 반대 24%).

이는 한국 지도자와 여론조사가 대만해협 상황을 한국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해 제시하는지가 직접 전투 개입을 제외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 대응을 강대국의 신호·요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안보·경제적 이익 즉 해상교통로 봉쇄, 서태평양에서 미국 세력의 후퇴, 북한·러시아의 동반 위협 고조 등에 근거한 능동적 정책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

대만 유사시 한국 대중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려 했다. 완전 중립 즉 비개입과 직접 전투 개입을 모두 바람직한 선택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에 한국이 갖는 직접·핵심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향후 어떤 정책을 택하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전략적 딜레마 가운데 하나를 새롭게 재구성할 때가 됐다.

저자

피터 리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도-태평양 안보, 미국 동맹체제, 중견국 외교 등이다.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멜버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국립대학교에서 전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팀장)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양적 연구방법, 조사방법론, 서베이(통계) 자료 분석 등으로, 사회과학 분야 측정 문제와 여론 및 그 동학에 관심이 있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6-04).

("Reframing South Korean Public Opinion Towards a Taiwan Contingency,"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_eng&wr_id=291)